

라이즈 계획,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든다

<RISE>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계획수립위원회 전체회의 지자체-혁신기관-대학 등 6개 분과 70여명 참여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산업 및 여건을 고려해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라이즈)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혁신기관 및 대학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괄 △지산학연협력 △창업 △의국인유학생 △평생교육 △지역문제해결 등 6개 분과에 70여명으로

구성됐다.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학과 혁신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협력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 4대 목표와 연계해 5개 내외의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별로 5개 내외의 단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는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구하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3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라이즈의 양대 축인 '전담기관 설립'과 '계획수립'을 중점 추진해 왔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7월 4일 전북테크노파크에 부설된 'JB지산학협력단'이 맡는다. "전북의 라이즈센터 설립 모형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평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 구성에 앞서 전문대학 주도 세미나, 기획처장 보고회, 라이즈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 포럼 등 도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해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정책의 키워드는 '지자체 중심'이며 라이즈는 그 핵심이다"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의 기틀이 되는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해 '지역발전'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기본방향에 의하면 라이즈 기본계획은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시도별 라이즈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까지 단위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도, 중기부 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

3D융합기술 활용 제품 생산 장비 구축 국비 14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기업들의 3D 융합 기술을 활용한 생산장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돼 국비 14억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주력산업인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산업에서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전기 구동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어 시장 흐름에 발맞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도내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D 융합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및 시양산 지원이 가능한 신규 장비 3대를 지원

원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구축 사업을 통해 농기계와 유사 플랫폼을 갖는 건설기계, 상용·특장차 등으로 순차적 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며, 기업 수요 조사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 지원사업 선정에 공을 세운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구축장비를 기구축 장비와 연계해 '디지털 적층 제조 전주기 One-stop 제품 상용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제품개발 기간 단축, 생산 비용 절감 등 제품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택립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변화에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비 구축과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혁신기관 및 대학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북자치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

지정농장 지원사업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상생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분 적정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을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성 확대 시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1천119호(전국 6천 671호, 16.8%)로 전남에 이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축산 생산자단체 및 계열업체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환경조성을 위한 정부 인증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시행

됐다.

축사바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악취, 경관 중심 평가 등 평가표에서 70점 이상 획득해야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농가는 축산관련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우선권이 부여되며 지정서 및 현판이 제공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축산농장 10호를 선정해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이니,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축종별 생산단체와 축산농가에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2024년 어민수당 신청하세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30일까지 접수...어가당 6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30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4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부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년 2,500여가 대상 15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60만

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지급 제외대상은 △신청한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부터 지급일까지 수산업법을 위반

한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수급 제외)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이다.

작년까지는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지침을 개정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을 거쳐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서류 및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이전인 9월 중에 시군별 지역화폐 등으로 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세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어민수당의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게 도내 많은 어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어민수당은 12개 시군 2,246어가, 13억원이 지원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닭 계열화업체 융자금 130억원 확보

계약농가 경영 안정화 기대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축산계열화사업 운영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5개 업체에 전국 사업비의 63%인 130억원을 확보해

용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약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용자 지원사업이다. 선정업체는 (주)하림, (주)동우푸드(이), (주)사조원, (주)일우, (유)가농이며, 융자금은 무이자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가축 구입비, 사료비 등 계열화사업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책자금 활용으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 해소와 계열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